

“옛 명성 찾자”... 만덕오리마을 ‘부활의 노래’

부산 북구청, 디자인개선 사업 실시

손님이 뜰해져 옛 명성을 잃어가던 부산 북구 ‘만덕 오리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마을 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 화다.

1월 27일 북구청에 따르면 만덕동 오리마을은 30여 년 전부터 오리와 염소요리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생겨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특유의 담백한 맛은 물론 대천천 금정산을 끼고 있어 유명세를 떨쳐왔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 건물이나 주변 환경이 노후화 되면서 손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근처에 모텔촌이 생기면서 가족단위 손님이 급감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관할 구청과 주민들은 마을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북구청은 만덕 오리마을의 간판부터 정비했다. 지난해 1월부터 ‘만덕 민속오리마을의 디자인개선사업’에 들어가 종합 안내도, 권역 안내판, 업소 간판, 마을 진·출입구 안내판을 달았다. 업소명과 전화번호로 도배되다 시피 했던 마을옹벽에는 오리마을 로고를 새기고 근처에 꽃을 심었다. 방문객들 편의를 생각해 공동 주차장도 조성했다.

손님들이 다시 찾기 시작하자 식당 상인들도 신바람이 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경력 20년이 넘는 마을의 오리 전문 요리사들 25명은 지난 1월 14~15일, 21~22일 요리학원에서 다시 요리요리교육을 받기도 했다. 상인 이모(57) 씨는 “워낙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손님들만 상대하게 됐다”며 “그렇다 보니 요리법을 발전시키거나 새로

운 요리를 개발하려 하지 않았고, 오던 손님도 점차 줄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다음 달 만덕민속오리마을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입소문에만 의지했던 오리마을을 좀 더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서다.

북구청 도시디자인과 최기봉 계장은 “구청에서 마을 지원사업을 해주자 상인들 사이에서도 ‘좀 더 발전시켜보자’는 움직임이 생겼다”며 “최근에는 손님이 늘어난 게 눈에 뵈 정도”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권용휘 기자 2013. 01. 27

해남 북일 오리농장 신축 추진, 주민반발 극심



전남 해남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수산물인 북일면.

민간 사업자가 북일면 지역에 기업형 오리농장 설립을 추진, 이장단 사퇴 움직임 등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북일면 삼성리, 만월, 월성 등 3개 마을 주민 50여 명은 삼성리 마을회관에서 오리축사 신축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오리농장사업주에게 주민들의 반대 입장 전달과 북일면 전체 마을을 아우르는 대책위를 구성, 이달 말경 해남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북일면 오리농장반대대책위(준) 관계자는 “2011

년 부지매입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해 다시 군에 전용허가를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자가 지난해 말 주민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오리농장 신축 추진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결사반대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 주민들의 뜻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일면 전체 마을 이장들도 3개 마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북일면 20여개 마을 전체 이장들이 이장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며, “전국 북일 향우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함께 힘을 보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리농장 신축이 추진되는 지역은 명산인 두류산도립공원 투구봉 아래 쇠노재 인근인데다 강진-완도간을 잇는 길목이라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철환 군수가 지난해 북일면을 방문, ‘청정바다에서나 가능한 매생이 양식 사업에 군수는 물론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에 오리농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에서 부결하면 업자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지만, 군은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까지 확인했다”고 밝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남 북일면은 내동 바지락, 빨낙지, 꼬막을 비롯한 김, 파래, 매생이 등을 생산하는 청정바다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롯데마트, 훈제오리 창사 이래 최저가 판매

롯데마트가 오리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훈제오리 1마리를 창사 이래 최저 가격인 7900원에 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불황으로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농가와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행사 가격은 평소 판매 가격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오리농가는 최근 불황 등의 여파로 소비량이 감소해, 최근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오리 도축 마리수는 8984만마리로, 전년보다 5% 늘었다. 매년 오리 도축량은 늘어, 2009년 도축량과 비교하면 지난해 도축량은 65%나 증가한 수치다.

오리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최근 불황의 여파로 오리 소비량이 공급량에 미치지 않아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오리 가격은 2kg 신선육 기준으로 7267원으로, 전년에 비해 17%나 하락했다. 오리고기 가공업체들은 판매 부진 때문에 생산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는 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훈제오리 물량을 준비하면서 기존 거래업체가 아닌 미거래업체의 재고 물량까지 매입했다. 이번에 준비한 물량은 약 10만마리로, 평소 행사 물량의 2배가량에 달한다.

박상용 롯데마트 조리식품 상품기획자는 “최근 오리의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오리 농가와 협력업체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세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협력업체의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리 소비 촉진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올림픽대로서 오리 운반 화물차 눈길에 미끄러져 1명 경상

오리 수백마리 도로로 쏟아져 일대 3개 차로
한 때 통제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올림픽대로에서 오리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미끄러져 옆

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오후 11시 31분에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밑 올림픽대로에서 오리 1500마리를 싣고 잠실에서 김포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5톤 덤프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충북 음성 농장에서 경기도 파주 공장으로 오리를 옮기던 화물차 운전자 박모씨(61·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상을 입었다. 또 오리 수백마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일대 3개 차로가 한 시간 넘게 통제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차 외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1 박현우 기자 2013. 02. 04

저질 오리고기가 유독 소고기와 양고기로 변신

중국 또 짝퉁 식품 유통

짜퉁 식품 범람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에 최근 또 다시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는 저질 오리 고기를 사용한 유독 소고기와 양고기가 수백 톤이나 제조돼 유통됐다.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 유독 식품을 만든 범인은 리(李)모라는 랴오닝(遼寧)성 랴오양(遼陽)의 도축업자 출신이다. 육류 가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십분 활용, 가볍게 지난해부터 제조했다고 한다.

방법은 간단했다. 저렴한 저질 오리고기에 접착제와 첨가제 및 염색제를 섞어 가짜 소고기와 양고기를 만든 다음 양고기 기름에 한 번 담그면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변신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 제품은 중금속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주범과 일당을 체포한 경찰과 식품 당국에 의하면 검출된 중금속이 하도 많아 일일이 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은 기준치의 2000배에 이르렀다는 것이 식품 당국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 고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호텔이나 식당에서 구입을 했다는 사실이다. 맛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값이 시중가의 최대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이 아마도 치명적인 유혹이 되지 않았나 보인다.

단속 당시 경찰에 압수된 가짜 고기는 40톤 가량이었다. 이로 볼 때 밀제조된 고기는 수백 톤에 이르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리모와 일당들은 이의 유통을 통해 수천만 위안(수십 억 원)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고기들이 6개 성과 시

에서만 유통됐다는 사실이다. 또 베이징까지 흘러가지 않았다고도 한다.

현재 중국은 식품 안전에 관한 범죄는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럼에도 가짜나 불량 식품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발각이 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제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2013. 02. 04

‘동산담보대출 5개월’ 쌀 담보로 10억, 한우는 6억

돼지 냉장정육, 냉동오리, 냉동명태 담보로 인정

‘쌀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고 한우를 맡기고 6억원을 빌린다’ 지난해 8월 국내 은행이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나타난 이색 사례다. 동산담보 대출은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쌀·냉동생선 등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2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경북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 쌀을 담보로 10억8천만원을 빌려줬다. 담보로 맡긴 쌀은 2만770kg에 달했다. 평가액은 27억원이지만 담보인정비율이 40%에 그쳐 대출액은 그만큼 축소됐다. 충북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달 콩, 팥, 수수 등 두류를 담보로 2천2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소도 눈길 끄는 동산담보물 가운데 하나다. 대출이

억 단위로 나간다. 전남의 한 한우농장은 한우 386두를 맡기고 6억원을 빌렸다. 소는 죽거나 팔려서 또는 값이 급락해 담보물 가치가 담보인정비율인 40%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칙적으로 그만큼 상환하거나 다른 소로 대체해야 한다. 소가 생물이어서 상태별로 담보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은행은 3개월 단위로 동산담보의 현황을 확인한다. 돼지는 살아 있는 상태로는 돈을 빌릴 수 없고 냉동정육만 담보로 인정받는다. 소와 달리 생육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아 대출기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 폐사율이 높아 담보가치가 낮은 점도 이유다. 그럼에도, 지난 1월 말까지 농협은행에서 돼지고기를 담보로 이뤄진 대출은 한 건도 없다. 농협은행은 하반기에 돼지담보대출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생돼지도 소처럼 담보로 인정해달라는 양돈 농가의 요구 때문이다. 마침 10월부터 농가별 돼지이력제가 시행돼 돼지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냉동 축산물로는 냉동오리 사례가 있다. 충북의 오리 육가공업체가 냉동오리 13억5천마리를 담보로 2억5천만마리를 빌렸다.

강원도의 한 식료품제조업체는 지난달 냉동명태를 맡기고 1억5천만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한우 농가들이 소를 담보로 한 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사료 확보를 위해서다. 사료를 현금으로 사면 신용결제보다 할인율이 좋다. 농축수산물을 담보로 농협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은 1월 말 현재 50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농협은행 측은 “농축수산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적이어서 동산담보 대출로 현금을 융통하는 일이 농·축·수산업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을 취급하고 있어 동산담보 사례가 대동소이하다. 외

환은행은 건설경기가 어려운데도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10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병수 · 구정모 기자 2013. 02. 05

식품 · 위생 안전업무 농림부 존치 ‘오리무중’

농림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은 여야 합의된 듯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협상중인 여야가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부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 등과 관련한 부문에서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사실상 합의된 내용을 놓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른 오전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농림축산부’라는 부처명칭에 ‘식품’자를 넣자는 민주당 요구에 새누리당이 동의했지만 안전관리부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품산업 진흥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규제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온 집행기능의 경우 식약처 권한으로 규정하되 실질적 이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같은 날 전국농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60여개 단체 및 농민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이 같은 개편안은 농축산업 말살시도

라며 저지 집회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 나선 농축산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진흥 업무만 남겨놔



반쪽짜리 부처가 돼 버렸다고 강력 반발 했다. 농축산인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고 농축산물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13. 02. 07

“청정 녹색마을에 대형 오리농장이라니”

“마을 입구에 오리 사육농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청정마을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오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개금마을에서 만난 임원택(50) 이장의 분노 섞인 탄식이다. 오리 때문에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근심·걱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가북면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개금마을은 거창에서 손꼽히는 고지대 오지마을로 44가구 100여 명이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오미자, 마, 고랭지채소, 약초 등을 재배하면서 살고 있는 곳이다. 주민의 70%는 60세 이상이다.

그러나 인근 마을의 정모(44·가북면 우혜리) 씨가 마을 입구인 용암리 762 일대 1만5324㎡에 오리 사육농장을 지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군에 5005㎡

규모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사실을 3개월 뒤인 11월께 듣게 되면서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다. 개금마을 주민들은 군수실과 건축허가 부서인 도시건축과를 방문, 경남도 농촌 장수마을이자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거창군 명품 귀촌타운까지 지정된 마을 입구에 오리농장이 들어설 경우 이미지 훼손은 물론,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군은 “가설 건축물 축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어 수리해 줄 수밖에 없다”며 지난 1월 19일 신고서를 수리했다.

주민들은 오리농장을 출입하는 도로변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한편, ‘녹색체험 마을에 오리농장이 웬 말이나’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 이장은 “44가구 중 6가구는 오리농장과 거리가 93m에 불과, 심각한 악취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지난해 2월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환경보전규약’을 만들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되는 대규모 오리농장을 설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이 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오리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10년 전 귀농한 김병주(69) 씨는 “약초 재배 등 농사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매달려 일도 못하고 있다”면서 “마을의 존폐와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공사 강행 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리농장을 추진 중인 정 씨는 “주민들과 협상하려 했으나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부지 매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고,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농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맞서,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경남신문 홍정명 기자 2013. 02. 22

국내 청둥오리 66% AI 감염 경험

야생조류 감염실태 조사...

혈액 379건 중 249건 항체 검출

우리나라의 대표적 겨울철새인 청둥오리 세 마리 가운데 두 마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국내 야생조류의 분변과 사체·혈액 등을 토대로 종별 AI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둥오리의 혈액 시료 379건 가운데 65.7%인 249건에서 AI 항체가 검출됐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혈액에 항체가 형성된 경우 과거 AI에 감염됐거나 현재 감염된 상태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가끔류에 전파되면 고병원성으로 전이할 우려가 있는 H5 유형은 4건이었다. 고방오리도 157건 가운데 100건(63.7%)으로 항체가 많이 검출됐다.

철새 20종 전체를 보면 891건 가운데 440건에서 항체가 검출돼 절반 정도가 AI 감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항원은 전체 혈액 시료 1천1건 가운데 16건에서 검출됐다. 분변에서는 전체 9천927건 가운데 5.1%인 506건에서 항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14건은 고병원

원성으로 전이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어느 시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AI 감염률이 가장 높은 청둥오리에서 H5 유형의 항원이 4건이나 검출됐다”며 “항체 형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감염 상태가 아니더라도 집단 내에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2013. 02. 26

소비자 “국산돈육 안먹을 땐 가금육”

농경연 조사, 대체육 닭고기·오리육 50% 육박

국산돼지고기의 대체육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축산물은 무엇일까. 예상과는 달리 수입쇠고기나 수입돼지고기가 아닌 가금육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 조사 결과 올해 국산돼지고기 대체재로 닭고기(24.9%)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생선 23.2%, 오리고기 19.6%, 한우고기 15.8%의 순이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는 8.5%, 수입돼지고기는 6.4%에 머물렀다.

특히 1년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생선과 오리고기의 대체비중이 2%p, 4%p 각각 증가한 반면 한우 고기는 1%p, 수입육은 2~3%p 감소하면서 오리 고기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3. 02. 12

“몸에 좋은 국산 오리고기 많이 먹어요”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남산 걷기 대회 참석자들이 지난 2월 17

일 오전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출발에 앞서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힘찬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이상석 한국일보 사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경제 홍인기 기자 2013. 02. 17

국내산 오리 인증제 시범 운영 시행

오리협회, 4개 업체에 첫 국내산오리 취급인증서 발급

■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 마크



■ 국내산 오리고기 홍보 캐릭터



한국오리협회가 국내산 오리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다.

한국오리협회는 국내산 오리인증제의 참여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거친 후 오리

자조금 및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4개 업체에 지난 2월 1일 국내산오리 취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국내산 오리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다. 이번에 인증 받은 4개 업체는 (주)코리아더커드(대표 박영진), (주)모란식품(대표 김만섭),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 (주)삼호유황오리(대표 이세종)이다. 본 인증사업은 오리자조금 및 회비를 완납한 계열·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오리협회는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2010. 8. 11)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산 저급 오리고기와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오리고기를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턴 국내산 오리인증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인증제 사업을 통해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오리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작년 2월 제1회 국내산 오리 인증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증사업을 계획하고, '2012 국내산 오리인증 CI 및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캐릭터 수상작은 국내산 오리고기 홍보 캐릭터로 작년부턴 각종 소비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CI 수상작은 국내산오리인증 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마친 상태이다.

라이브뉴스 도내희 기자 2013. 02. 20

축산법시행령 개정, 축산업 허가제 2월 23일 시행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기업농,
허가제 대상 포함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을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이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이번 개정시행령에 담았으며 종축업(종돈·종계·종오리 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50) 등 923개소를 비롯해 사육면적 1200㎡ 초과하는 소, 2000㎡ 초과하는 돼지, 2500㎡ 초과하는 닭·오리 기업규모의 대형 농장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기존사업장은 2013년 2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소급적용하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월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사육업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기업 농가를 시작으로 14년 전업농가, 15년 준전업농가, 16년 50㎡이상 농가까지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예 :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의 경우 현재와 같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되며 축산업 등록 대상에서 빠졌던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일 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3. 02. 21

전북도, 오리농장 대상 AI 일제검사 실시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2월 18일부터 3월 12일 까지 오리 농장 대상 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도내 종오리 농장과 육용오리

20마리 이상 사육 농장 등이다. 이번 일제검사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호주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나라로 야생철새가 이동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오리는 닭과 달리 AI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는 사전 예찰이 중요하다”면서 “농가는 차단방역은 물론이고 의심축이 발견되면 곧바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김춘상 기자 2013. 02. 13

전통시장 닭·오리 저병원성 AI 급증

전국 무작위 유통가금류 AI항원 검사...
전년비 25.6배 천안지역 야생조류 7마리당
1마리 검출돼 예방 요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발생시 큰 피해를 겪었던 천안에서도 병천장과 성환장을 중심으로 가금류가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예찰 및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 355개소 가운데 160개소에 대한 검역검사본부의 무작위 유통 가금류 AI 항원 검사결과 2478건 가운데 205건(8.27%)이 AI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는 2011년 8건(0.3%) 검출대비 무려 25.6배가 증가한 수치다.

충남은 208건의 검사결과 11건(5.3%)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양성반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7.5%)이고, 광주(33.3%), 울산(17.5%), 부산(16.7%), 충북(14.6%)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에서는 32건의 검사에서 단 1건의 양성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고병원성 전이 가능성이 높은 H5와 H7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검역검사본부는 최근 캄보디아, 홍콩, 부탄, 네팔 등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천안은 야생조류 AI검사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인 7마리당 1마리 꼴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천안에서도 병천장과 성환장을 중심으로 가금류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가 각 2개씩 총 4개가 운영 중에 있다.

천안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는 안성과 진천 등지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이 현실화될 경우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유통 가금류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업주를 찾아 차량 소독 등에 대한 주문과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유창림 기자 2013. 02. 15

AI · 구제역 치료제 개발 한걸음 더

연세대 김영준 교수팀
면역증가 OASL1 첫규명

조류인플루엔자과 구제역, 사스(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등 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월 17일 김영준 연세대 교수 연구팀이 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OASL1’ 유전자의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면 매우 강한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이날 면역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이뮤놀로지’ 온라인판에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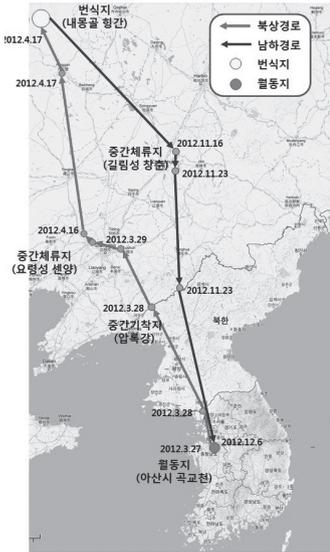
김 교수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사스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런 감염 질환을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강은 기자 2013. 02. 17

AI 전파 ‘청둥오리’ 이동경로 최초 확인

충남 아산서 월동, 중국 거쳐 아산으로 되돌아와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의 주요 전파 매개체로 지목돼온 청둥오리의 월동시기, 이동경로 등이 국



내 최초로 밝혀졌다. 청둥오리는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2010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11월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월동했던 청둥

오리가 중국 선양, 내몽골, 장춘, 압록강 등을 거쳐 2012년 12월 곡교천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월 19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2011년 11월15일 곡교천에서 청둥오리를 포획해 인공위성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이동경로와 번식지를 추적해왔다.

위치추적 결과 청둥오리는 곡교천에서 월동 후 2012년 3월 27일부터 3일간 700km를 날아 중국 요령성 선양에 도착했다. 약 2주일간 머문 후 다시 4월 16일부터 2일간 670km를 날아 내몽골 횡간에 도착해 총 20일간 1370km 거리를 복상했다.

가을철 남하 시에는 북상경로와 달리 2012년 11월 16일 중국 길림성 장춘 인근으로 이동해 1주일간 머문 후 북한의 자강도 초산 인근 압록강을 거쳐 2012년 12월 6일 지난해 월동지였던 곡교천에 도착했고 총 20일간 약 1300km를 이동했다. 청둥오리는 2012년 4월 17일 내몽골 횡간 지방 북서쪽 85km 지점에 도착한 후 주변 소하천에 머물며 최대반경 10km 이내에서 활동했고 이곳을 번식지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둥오리의 월동지와 번식지의 활동반경, 장거리 이동특성 등을 처음으로 밝혀냈고 동일지역을 월동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갈 때에는 거리상 중간지점인 선양과 장춘의 도시외곽 하천에서 1~2주일간 머물고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환경과학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유입원으로 관심받고 있는 청둥오리의 장거리 이동 습성이 파악됐다”며 “향후 중국이나 몽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유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1 이은지 기자 2013. 02. 19

독일에 조류인플루엔자... 오리류 살처분

독일 동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오리 1만여 마리가 도살처분됐다.

독일 연방연구소는 베를린 동부 지로우 지역에서 AI 원인 바이러스인 H5N1을 지난 2월 15일(현지 시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16일 해당 지역의 오리 1만4천 마리를 도살했다. 토비아스 세이파르트 지역의회 대변인은 AI 발생지역 반경 1km 이내 지역의 가금류와 사육 시설 상태를 앞으로 3주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내 농장주들은 이상 징후가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대개 가금류에 나타나지만 때로는 인간에게도 옮겨간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로는 2003년 처음 나타난 조류인플루엔자로 모두 367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2013. 02. 16